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제 목 사회양극화(교육 의료분야 사회적 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날 짜 2006년 4월 27일(총 3장)

보 도 자 료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교육, 의료 부문) 발표 대전 - 교육, 의료부문까지도 양극화 동서격차로 나타나...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26일) 빈곤, 노동분야에 대한 사회양극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오늘(27일) 지난 3년간 대전시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민간연구소 등에서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교육, 의료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대전지역의 사회양극화 실태진단을 위해 빈곤노동의료교육분야의 문헌을 참고로 한 실태조사결과 사회양극화가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체적으로 교육부문의 사회적 양극화는 동서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면서 동서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지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의 개발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3백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의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양육방법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학원이 39.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0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동

끼리 보낸다는 비율이 1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 125만원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소득 125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125만원 이내의 가구에서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과 상층의 사교육비가 3백여 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 하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실 현황을 보면 서구 지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설학원의 경우도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강의실 수가 나머지 3개 지역(동구, 중구, 대덕구)의 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부문의 사회적 양극화는 동서간 격차로 나타남에 따라,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의료분야>

우리나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1백 5십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전지역은 4만 여명으로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5개 구 중 동구가 28.8%인 1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집중화되는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질병부담(DALY)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주간 유병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질병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01만 원 이상의 가구보다 2배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평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고 육체적 노동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스스로의 건강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 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 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보건소 1개소당 588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도시형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심각하며, 수급권자 대비 공공의료 혜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바 도시보건지소 설치 등의 자치구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26일) **빈곤과 노동**에 대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27일)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5월 2일에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5.31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 첨부자료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1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김형돈

Ⅲ. 교육의 양극화

1. 교육의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

- 교육의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연관성 및 불평등의 대물림 양상은 선발 산업국가에서 매우 두드러짐.
 -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¹⁾, 직업지위상의 불평등의 약 48%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약 22%가 가정배경에 의해 결정됨.
- 시장경쟁의 원리가 인간 생활 전 영역에 파고들수록 사회 구조적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되며, 경우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대물림이 합법화됨.

○ 2006년 1월 23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토대로 2000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소득계층별 소비품목 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20% 계층의 경우 교육비 지출 비중이 평균 13.3%로 가장 컸다.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주거비 등 필수 품목의 부담이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득 상위계층이 교육에 높은 투자를 통해 자녀의 성공확률을 높이므로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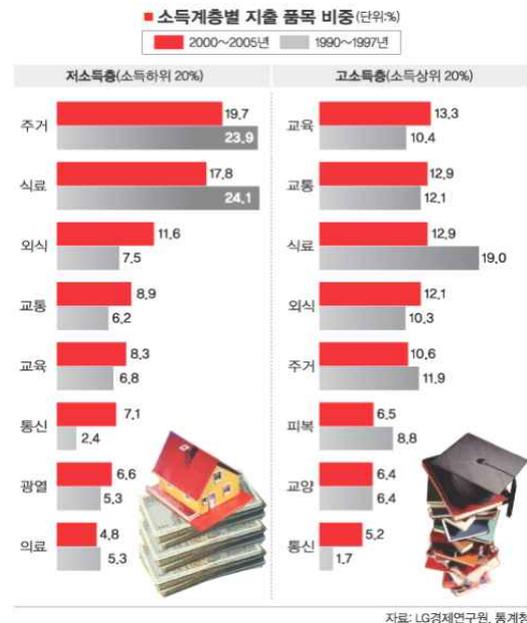


그림3. 세계일보 2006.01.23

-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비교적 활발했던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사회적 계층상승의 통로로 작용한다고 여겨졌지만 불평등의 역사는 깊음.
 - 60년대 초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계층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계수는 .36으로 매우 높게 나왔음(이성수 외, 김기석(2005)에서 재인용).
 - 당시의 중학교와 고교의 이중 입시를 통해, 학력 대물림 현상은 60년대 초기에도 작동하고 있었음.

1) C. Jenks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C. Jenks, et al.(1979), *Who Gets Ahea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ucces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 교육빈곤층의 현황

○ 초·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동구가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성구의 경우 8백 명으로 가장 적은 학생수를 보이고 있으며 타 구에 비해 1천 명 정도 차이가 남. 특히나 초등학생이 5천여 명 정도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으며 저학년일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초·중·고등학생의 구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초+중+고)	초등	중등	고등	소년소녀가장
동구	3,212	1,439	911	862	10
중구	2,724	1,125	798	801	12
대덕구	1,722	833	496	393	10
서구	2,790	1,374	750	666	54
유성구	856	257	300	299	26
계	11,304	5,028	3,255	3,021	112

· 대전시 5개구청 정보공개 요청자료, 2005.12

○ 교육의 분야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정도와 이를 미납한 비율은 곧 교육 빈곤의 최저선을 나타내는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님. 더구나 급식비 미납자는 생계보조를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준빈곤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상당한 교육권을 위협받고 있음.

○ 2005년도 기준 전국평균 학교급식비 지원비율이 6.0%, 미납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원비율은 6.4%로 평균에 상회하며 미납비율은 0.1%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실업계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타 학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급의 경우 급식비미납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05년도 급식지원을 받거나 급식을 미납하고 있는 학생, 곧 빈곤으로 인해 학습권을 위협받는 인구집단이 전체 학생 대비 7%로 1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표 23> 학급별 급식비지원과 급식비 미지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학급별									
		초		중		고					
						인문계		실업계		계	
전체학생 수	2004	131,906		63,037		43,665		13,952		252,560	
	2005	130,589		65,551		43,829		14,388		254,357	
급식비지원	2004	4.3	5,727	6.7	4,231	7.1	3,109	21.4	2,986	6.4	16,053
	2005	5.0	6,638	8.2	5,397	6.3	2,777	19.0	2,740	6.9	17,552

급식비미납	2004	0.09	127	0.1	84	0.1	32	0.0	0	0.1	243
	2005	0.07	98	0.2	129	0.2	89	0.04	6	0.1	322
급식지원미납	2005	5.2	6,736	3.9	213	6.5	2,866	19.0	2,746	7.0	17,874

· 주: 회색 칸에 있는 수치는 당해 대비 지원 및 미납 비율임
· 대전광역시 교육청, 2005년 9월, 학교급식비 지원 실적

2. 빈곤층 저학년의 방임화

- 맞벌이의 증가와 가족해체로 인해 방과 후의 취학아동 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임. 취학아동의 경우 사설학원 외에는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 아동방임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방과 후 아동 보호는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 없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
- 대전의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양육방법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학원이 39.1%를 차지하였음. 또한 10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동끼리 보낸다는 비율이 10.8%나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임.

<표 24> 취업부모의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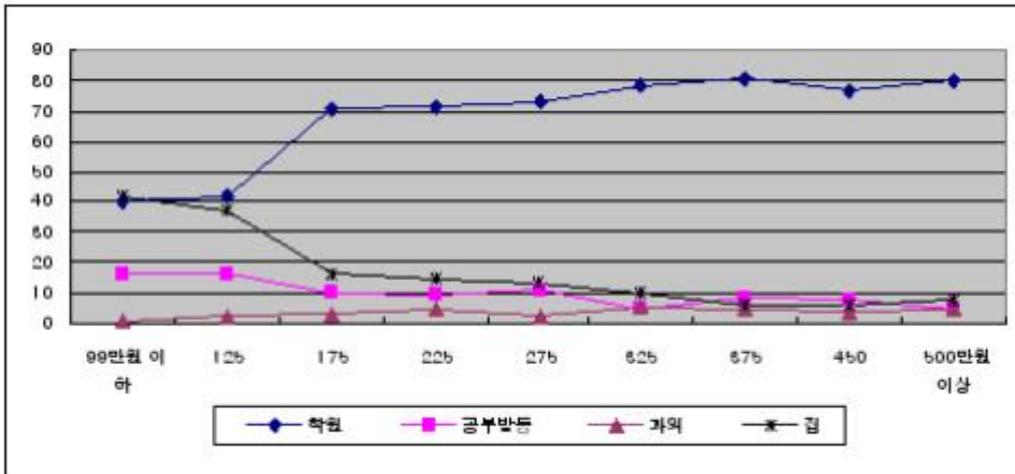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자녀 부모	자녀 조부모	가족 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혼자, 아동끼리 보냄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반일제	보육 시설 종일제	보육시설 반일제	학원	방과후 교실	기타
전국평균	60.5	14.2	2.8	1.0	9.2	4.1	9.7	6.7	7.3	33.1	4.3	0.1
대전	58.2	10.3	2.3	1.3	10.8	2.3	11.1	7.4	6.9	39.1	5.4	0.0

· 주: 추산인구 수는 대전 만 10세 미만 자녀 총 수 대비 각 비율을 적용한 것임.
· 통계청, 2005년, 사회통계조사

- 특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며 이는 방과 후 취학아동이 대부분 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보호와 사교육비용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 125만원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소득 175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125만원 이내의 가구에서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여성가족부, 2005년,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표 25> 제 특성별 귀가 후 시간 보내는 방법

(단위: %, 명)

구분	사설 학원	공부방/ 방과 후 프로그램	집에서 과외	다른 장소에 서 과외	집 (보호자 유)	집 (보호자 무)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69.0	9.4	1.7	2.8	12.0	4.5	0.6	100.0	(3431)	-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71.6	10.5	1.9	1.8	10.7	2.7	0.8	100.0	(1664)	50.1(6)**
초등고학년생	66.6	8.4	1.4	3.7	13.2	6.2	0.5	100.0	(1767)	
지역										
대도시	70.9	8.4	2.1	2.4	11.2	4.5	0.5	100.0	(1592)	52.5(12)**
중소도시	70.2	8.0	1.8	3.7	11.9	3.7	0.7	100.0	(1226)	
읍·면	61.9	14.6	0.4	1.8	14.3	6.2	0.8	100.0	(613)	
현재 모취업										
취업	69.9	10.1	1.1	2.7	7.0	8.3	0.9	100.0	(1634)	290.8(12)**
미취업	71.2	7.5	2.4	3.1	14.9	0.4	0.5	100.0	(1629)	
모부재	39.5	21.1	-	0.4	32.3	6.7	-	100.0	(16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0.4	16.6	-	0.9	31.5	10.6	-	100.0	(242)	477.0(48)**
100~149만원	41.7	16.6	0.7	1.7	25.8	11.6	1.9	100.0	(344)	
150~199만원	70.6	10.0	0.5	2.8	13.6	2.5	-	100.0	(474)	
200~249만원	71.2	9.5	1.9	2.4	11.1	3.4	0.5	100.0	(893)	
250~299만원	73.1	10.5	-	2.0	4.7	8.6	1.1	100.0	(143)	
300~349만원	78.4	4.6	2.0	3.7	7.9	2.3	1.1	100.0	(467)	
350~399만원	80.9	8.7	0.6	3.8	5.0	1.0	-	100.0	(175)	
400~499만원	76.7	7.6	2.9	6.0	4.3	2.1	0.4	100.0	(299)	
500만원 이상	80.0	4.9	4.1	2.0	4.6	3.5	0.9	100.0	(394)	

· 주: ** p<.01

· 여성가족부, 2005년,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3.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불평등

1)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

○ 교육청에서 「대전지역 사교육 실태 및 공교육 발전방향, 2004년」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은 더 이상 특별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그러기에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수준(비용과 내용)이 성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6>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현황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3년	88.8	84.6	77.6
2004년	85.1	81.4	73.7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4년, 「대전지역 사교육 실태 및 공교육 발전방향」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현황을 파악해 보면, 소득수준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1백만 원 정도가 사교육에 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과 상층의 사교육비가 3백 여 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임.

<표 27> 소득수준별 연평균 사교육비 규모 (단위 : 만원)

소득 수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저소득층 (~ 150)	12.6
중 하 층 (150 ~ 300)	18.1
중 상 층 (300 ~ 450)	25.6
상 층 (450 ~)	36.2

· 최상근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18

○ 성적 수준별 사교육비를 보면, 상위권으로 진입할수록 그 비용지출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또한 학부모의 주관은 곧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학부모가 그 자녀의 상위권성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

○ 가정의 경제적 조건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 성적이 높음.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은 16%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은 43%로서 후자는 전자의 세 배 가까이 되고 있음.

○ 반대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하인 학생은 약 45%이지만, 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하인 학생은 18%에 불과함

<표 28>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적 분포(중학교) (단위 : %)

	성적에 따른 학생 수 (%)			합계
	상	중	하	
100만원 미만	23 (16.3)	55 (39.9)	63 (44.7)	141 (100.0)
100~200만원 미만	108 (24.3)	192	144 (32.4)	444 (100.0)
200~300만원 미만	155 (31.7)	216	117 (24.0)	488 (100.0)
300~500만원 미만	164 (40.1)	153	91 (22.3)	408 (100.0)
500만원 이상	62 (43.3)	55 (38.4)	26 (18.2)	143 (100.0)
전체	512 (31.5)	671 (41.3)	441 (27.2)	1624 (100.0)

· 직업능력개발원(2004). 한국교육고용 패널 조사

○ 이상에서 가정의 경제적 조건을 교육사회에서 소외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판단됨.

<표 29> 도시 저소득 지역 학생의 학업성적 (단위 : %)

학업 성적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계
전 체	609 (42.9%)	1335 (42.9%)	919 (29.5%)	252 (8.1%)	3115 (100%)
잘 삼	220 (23.2%)	469 (49.6%)	206 (21.8%)	51 (5.4%)	946
보 통	332 (19.1%)	784 (42.7)	576 (31.4)	142 (7.7)	1834
못 삼	47 (16.5)	66 (23.2)	120 (42.3)	51 (18.0)	284

· 이혜영(2002).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2) 지역간 교육재정에 따른 불평등

(1) 재정자립도(경제력지수)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는 2004년 기준으로 74.4%로 전국 4위에 해당된다[표16 참조]. 한편,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와 서구가 각각 44.1과 41로

전국 233개 자치 시·군·구 중 39위와 51위를 차지했고, 중구(92), 대덕구(109), 동구(126)순이었으며 특별·광역시·군·구수는 72개 중 유성구와 서구는 17위와 26위, 그리고 중구(53), 대덕구(56), 동구(68)로 하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음[표17 참조].

<표30> 2004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

시·도별	시·도별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57.2	81.4	41.3	38.8	16.6	42.6
서울	95.5	94.5	—	—		50.3
부산	75.6	72.7	—	—	42.5	36.8
대구	73.2	71.4	—	—	33.0	34.0
인천	75.9	70.8	—	—	20.8	38.3
광주	59.8	54.6	—	—		26.8
대전	74.4	69.6	—	—		34.4
울산	69.6	65.8	—	—	48.6	38.1
경기	78.8	—	78.0	52.0	21.3	—
강원	28.9	—	24.2	26.7	17.3	—
충북	31.3	—	26.2	35.3	18.1	—
충남	30.5	—	26.2	29.2	18.4	—
전북	25.9	—	18.9	26.8	14.3	—
전남	21.1	—	14.2	29.6	11.4	—
경북	29.4	—	22.3	30.5	15.0	—
경남	38.3	—	34.1	36.2	14.4	—
제주	34.7	—	29.1	30.2	17.7	—

주 : 1.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 이러한 구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자치구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됨.

<표31> 2004년도 전국 자치시·군·구별 재정자립도

자치구	2001	2002	2003	2004	전국 자치 시군구별 순위	광역시 자치구 순위
서 구	39.4	40.1	37.1	41	51	26
유 성 구	45.8	37.8	35.9	44.1	39	17
대 덕 구	33.6	32.8	31.5	29.4	109	53
중 구	37.5	30.3	33.5	32.2	92	59
동 구	24.9	23.8	23.6	24.6	126	68

※ 전국 자치시·군·구 수는 233개, 광역시 자치시·군·구 수는 72개

(2) 지역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서는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재정은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적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자치구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18 참조]

<표32> 2002-2004년 16개 광역 지자체별 비법정전입금 총액 (단위: 백만원)

	광역지자체(시도)		비법정전입금		광역교육청(시도)	
	전체 예산(A)	평균 재정자립도	금액(B)	비율(B/A)	전체 결산액 (C)	전체 결산액 대비 비법정전입금(B/C)
서울	30,029,253	94.8%	42,928	0.143%	14,558,883	0.29%
부산	9,509,425	70.1%	9,041	0.095%	6,570,402	0.14%
대구	5,728,067	70.2%	10,390	0.181%	4,360,052	0.24%
인천	6,138,613	72.6%	12,989	0.212%	5,142,127	0.25%
광주	3,944,230	56.5%	523	0.013%	2,869,902	0.02%
대전	3,672,900	69.4%	415	0.011%	2,957,285	0.01%
울산	2,844,935	64.7%	1,000	0.035%	2,744,074	0.04%
경기	22,385,399	74.6%	97,657	0.436%	19,686,438	0.50%
강원	8,064,143	22.7%	1,883	0.023%	3,732,216	0.05%
충북	4,613,878	26.0%	6,354	0.138%	3,513,346	0.18%
충남	5,969,950	24.3%	426	0.007%	5,069,330	0.01%
전북	5,686,675	18.1%	2,038	0.036%	4,888,017	0.04%
전남	8,022,115	14.0%	356	0.004%	5,503,728	0.01%
경북	8,558,640	22.5%	3,188	0.037%	6,174,821	0.05%
경남	11,044,002	32.4%	2,037	0.018%	7,011,382	0.03%
제주	2,471,217	30.9%	1,681	0.068%	1,217,207	0.14%
계	138,683,442		192,923	0.139%	95,999,232	0.20%

* 02-04년 기초지자체들은 총 예산 154조원 중 4,511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0.293%)을 지원함.

○ 한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지만, 대전시내 5개 자치구 가운데 한군데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표19> 참조]

<표33> 대전시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현황(예산액 기준)

(단위: 천원,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해당조항별 보조금										
지역 교육 청명	해당 시,군,구	연 도 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 교 수 (B)	학생수 (C)	계(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 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동부	동구	2001	112,439,071	42	38,232	28,996	0.03%	690.38	0.8	무
		2002	128,830,000	43	37,023	23,600	0.02%	548.84	0.6	
		2003	289,529,000	43	35,941	47,000	0.02%	1,093.02	1.3	
		2004	154,840,000	43	35,448	397,661	0.26%	9,247.93	11.2	
		소계	685,638,071	171	146,644	497,257	0.07%	2,907.94	3.4	
	중구	2001	124,303,000	51	50,080	72,900	0.06%	1,429.41	1.5	무
		2002	122,020,400	53	48,848	82,960	0.07%	1,565.28	1.7	
		2003	262,060,788	53	48,184	18,420	0.01%	347.55	0.4	
		2004	134,200,000	54	48,022	335,425	0.25%	6,211.57	7.0	
		소계	642,584,188	211	195,134	509,705	0.08%	2,415.66	2.6	
	대덕구	2001	88,170,000	35	38,359	98,659	0.11%	2,818.83	2.6	무
		2002	95,740,000	36	38,220	80,490	0.08%	2,235.83	2.1	
		2003	203,893,000	36	38,394	119,593	0.06%	3,322.03	3.1	
		2004	120,800,000	36	38,425	242,354	0.20%	6,732.06	6.3	
		소계	508,603,000	143	153,398	541,096	0.11%	3,783.89	3.5	
서부	서구	2001	128,036,412	69	86,167	42,600	0.03%	617.39	0.5	무
		2002	148,260,921	69	86,499	694,730	0.47%	10,068.55	8.0	
		2003	315,722,884	70	87,776	607,128	0.19%	8,673.26	6.9	
		2004	172,905,000	74	88,611	1,201,427	0.69%	16,235.50	13.6	
		소계	764,925,217	282	349,053	2,545,885	0.33%	9,027.96	7.3	
	유성구	2001	75,132,094	43	38,022	63,280	0.08%	1,471.63	1.7	유
		2002	93,561,800	44	39,846	173,062	0.18%	3,933.23	4.3	
		2003	229,071,960	47	41,545	186,400	0.08%	3,965.96	4.5	
		2004	113,052,000	49	42,935	366,575	0.32%	7,481.12	8.5	
		소계	510,817,854	183	162,348	789,317	0.15%	4,313.21	4.9	
합계	2001	528,080,577	240	250,860	306,435	0.06%	1,276.81	1.2		
	2002	588,413,121	245	250,436	1,054,842	0.18%	4,305.48	4.2		
	2003	1,300,277,632	249	251,840	978,541	0.08%	3,929.88	3.9		
	2004	695,797,000	256	253,441	2,543,442	0.37%	9,935.32	10.0		
	소계	3,623,386,184	1,173	1,168,925	5,672,577	0.16%	4,835.96	4.9		

※ 자료: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2005년

(3)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

- 유의미한 수는 아니지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부 지역이 학원비와 과외비에서 고액의 사교육비가 동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4> 1개월을 기준으로 1인당 학원비 (단위 : 명)

금액	7만원 이하	10만원 (8-12만원)	15만원 (13-17만원)	20만원 (18-22만원)	25만원 (23-27만원)	30만원 (28-32만원)	35만원 (33-37만원)	40만원 (38-42만원)	45만원 (43-47만원)	50만원 (48-52만원)	51만원 이상	
동부	114	9	21	16	23	13	13	4	5	4	1	5
서부	124	7	30	9	30	13	7	6	5	3	2	12

· 200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설문조사 재구성

<표 35> 1개월을 기준으로 1인당 과외비

금액	7만원 이하	10만원 (8-12만원)	15만원 (13-17만원)	20만원 (18-22만원)	25만원 (23-27만원)	30만원 (28-32만원)	35만원 (33-37만원)	40만원 (38-42만원)	45만원 (43-47만원)	50만원 (48-52만원)	51만원 이상	계
동부	6	7	11	21	11	14	4	7	0	4	10	95
비율	0.06	0.07	0.12	0.22	0.12	0.15	0.04	0.07	0	0.04	0.11	100
서부	10	7	8	14	15	18	9	16	3	8	14	122
비율	0.08	0.06	0.07	0.11	0.12	0.15	0.07	0.13	0.02	0.07	0.11	100

· 200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설문조사 재구성

- 독서실 현황을 보면 서구 지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서실 등록자수를 보면 동구, 중구 지역의 합계 수가 서구 한 지역의 4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6> 독서실 개황

구 분	독서실수	등록자수		직 원 수		월수강료(원)	
		계	여자	계	여자	최 고	최 저
총 계	146	4605	2225	89	36	61900	56500
동구	6	246	146	2	2	61000	61000
중구	32	478	238	16	8	56500	56500
서구	71	2665	1208	56	18	59944	59944
유성구	15	508	243	7	4	58933	58933
대덕구	22	708	390	8	4	61900	61900

·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자료

<표 37> 독서실 시설현황

구 분	열람실수	사무실수	열람좌석수	보유장서수	기타시설
총 계	776	142	15,752	10,519	285
동 구	62	6	692	1,660	20
중 구	142	32	3,048	4,250	58
서 구	357	67	7,918	3,764	131
유성구	71	15	1,580	655	22
대덕구	144	22	2,514	190	54

·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자료

- 사교육비의 주를 차지하는 사설학원시설 현황을 보면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강의실 수가 나머지 3개 지역(동구, 중구, 대덕구)의 3배에 이르고, 열람좌석수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의 동서부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표 38> 시설학원시설 현황

구 분	강 의 실	실험실습실	교구보유수	사 무 실	열람좌석수	보유장서수	기타시설
총 계	9,984	2,030	72,872	1,507	147,438	335,995	2,242
동 구	1,090	298	6,482	212	10,928	26,862	294
중 구	1,872	438	7,026	302	25,536	44,904	424
서 구	4,229	560	40,551	573	85,335	184,576	918
유성구	1,135	256	12,769	156	13,227	42,543	174
대덕구	1,658	478	6,044	264	12,412	37,110	432

·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자료

- 이런 현상은 사설학원 수강자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사설학원개황

구 분	학원 수	수강자 수		이수자 수		강사 수		직원 수		평균수강 시간(월)		월수강료(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총 계	1,928	127,003	66,280	187,920	96,933	5,843	3,721	1,402	835	96	11	165,000	54,200
직업기술	168	14,243	7,964	24,646	12,920	410	281	155	107	83	20	121,200	64,800
국제실무	186	30,918	15,876	60,191	32,706	953	636	298	180	30	20	98,000	80,000

인문사회	27	3,065	1,570	6,422	3,526	171	6	54	31	96	11	165,000	89,000
경영실무	71	2,254	971	1,985	757	133	97	36	28	56	25	131,500	54,200
예능	710	27,332	17,023	22,413	12,983	1,108	883	280	174	35	27	77,116	61,300
입시검정및 보충학습	766	49,191	22,876	72,263	34,041	3,068	1,818	579	315	44	38	105,595	80,000
동구	278	14,772	7,724	15,738	7,252	668	388	208	120	90	20	165,000	54,200
중구	384	23,670	12,784	27,378	15,082	1,064	748	312	180	83	11	147,500	75,400
서구	691	54,529	28,489	100,773	52,743	2,430	1,410	498	313	96	25	132,889	72,412
유성구	248	16,086	7,961	28,935	14,326	691	477	172	102	56	23	105,595	65,900
대덕구	327	17,946	9,322	15,096	7,530	990	698	212	120	40	20	131,500	63,000

·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자료

=> 전체적으로 교육부문의 사회적 양극화는 동서간 격차로 나타남에 따라,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됨.

IV. 의료양극화

1. 의료빈곤층의 현황

- 우리나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1백 5십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전지역은 4만 여명으로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였음.
- 대전지역은 1종과 2종이 각각 5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종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46.6%로 가장 많음.

<표 40> 대전지역 유형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계	기초생활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국가유공자	기타	차상위희귀난치	소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만성질환
전국	1,528,843	919,181	729,537	86,374	83,999	14,802	4,469	609,662	596,639	13,023
대전 총	43,286	22,838	16,711	3,031	2,701	290	105	20,448	20,189	259
남	19,046	10,100	7,076	1,621	1,229	114	60	8,946	8,829	117
여	24,240	12,738	9,635	1,410	1,472	176	45	11,502	11,360	142

· 주: 기타 - 북한이탈주민+인간문화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이재민+의상자및의사자유족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년, 의료급여통계

- 대전지역 5개 구 중 동구가 28.8%인 1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서임.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 수급권자수가 매우 적게 나타남.

<표 41> 보장기관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

보장기관	계		1종	2종
계	43,286	100.0%	22,838	20,448
동구	12,457	28.8	6,652	5,805
중구	9,461	21.9	4,280	5,181
서구	9,535	22.0	5,281	4,254
유성구	3,884	9.0	2,433	1,451
대덕구	7,949	18.4	4,192	3,75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년, 의료급여통계

-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 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 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함.

<표 42> 시·도별 동 평균 취약계층 인구 구성비

시·도	행정동 수	동 평균 인구수	동 평균 65세이상 노인		동 평균 의료급여자		동 평균 등록장애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522	19,489	1,322	6.8	244	1.3	537	2.8
부산	221	16,229	1,254	7.7	366	2.3	518	3.2
대구	134	17,678	1,291	7.3	389	2.2	565	3.2
인천	119	20,999	1,296	6.2	386	1.8	718	3.4
광주	90	15,569	1,051	6.8	390	2.5	512	3.3
대전	79	18,046	1,209	6.7	328	1.8	556	3.1
울산	46	19,720	856	4.3	291	1.5	553	2.8
경기	371	22,638	1,356	6.0	310	1.4	644	2.8
강원	74	12,097	1,077	8.9	346	2.9	496	4.1
충남	39	17,652	1,182	6.7	350	2.0	574	3.3
충북	50	17,831	1,243	7.0	361	2.0	614	3.4
전남	70	11,459	809	7.1	396	3.5	430	3.8
전북	92	13,701	1,095	8.0	440	3.2	561	4.1
경남	115	15,905	955	6.0	342	2.2	497	3.1
경북	100	13,294	943	7.1	320	2.4	436	3.3
제주	31	12,253	896	7.3	387	3.2	408	3.3
평균	135	16,535	1,115	6.9	353	2.2	539	3.3

<자료> 1) 통계청 (200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04년 12월 31일 기준)

2.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의 불평등

- 건강 수준과 그에 따른 형평성을 평가하는 변수로 주관적 건강평가, 신체적 건강, 흡연·영양소섭취, 스트레스, 의료이용 경험률, 의료비 등이 작용함.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건강이 집중화되는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함.
- 질병부담(DALY)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 가구소득과 생활비를 기초로 계층을 5분위로 구분한 결과, 질병부담차이가 뇌졸중에서 가장 큼.

<그림 5> 주요 상병으로 인한 장애년수(YLD)의 사회계층간 격차



주: 사회경제적 수준별 5분화 계층의 최상위층(Q5) 및 최하위층(Q1) YLD 추정결과. 단, 2001년말 상주인구 기준 성-연령 표준화를 실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2주간 유병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질병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01만 원 이상의 가구보다 2배나 질병율이 높음.

<표 43> 월가구 소득별 2주간 유병자 현황

(단위 : %)

월가구소득	계	N	질병있음				질병없음
			소계	만성	급성	급만성	
100만원 이하	100.0	10,053	52.97	42.75	4.45	5.77	47.03
101~200만원	100.0	15,273	37.09	25.51	7.15	4.43	62.91
201~300만원	100.0	6,774	34.50	23.42	7.30	3.78	65.50
301만원 이상	100.0	3,334	33.29	22.95	5.97	4.37	66.71

· 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자신의 건강평가에 차이를 보임. 교육 수준에서, 초졸 이하는 좋은 편이 24.9%인데 반해 나쁜 편이라는 평가가 42.7%이나 대졸 이상은 좋은 편이 56%, 나쁜 편이 5.8%임. 직업부분에서 전문관리와 기능노무직을 비교했을 때, 좋은 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나쁜 편이라는 비율에서 전문관리직은 5.0%인데 반해 기능노무직은 12.2%로 2배의 차이를 보임.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육체적 노동일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측면으로 보았을 때 건강평가에 있어서 경제적 계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 대전시 건강평가

(단위 : %)

시점:2003	15세 이상 인구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초졸이하	100.0	3.8	19.1	34.5	35.5	7.2
중졸	100.0	9.8	29.6	41.5	18.1	1.0
고졸	100.0	9.9	39.6	40.0	9.7	0.8
대졸이상	100.0	11.2	44.8	38.3	5.1	0.7
전문관리	100.0	13.7	45.7	35.6	5.0	-
사무	100.0	11.5	47.6	36.1	4.8	-
서비스판매	100.0	5.3	35.1	44.0	14.7	0.9
농어업	100.0	-	43.3	41.3	15.4	-
기능노무	100.0	8.0	36.0	43.8	11.9	0.3

· 통계청, 2003년

- 가구소득이 낮은 초졸 이하, 기능노무직 가구일수록 금연시도율이 낮으며 계속 흡연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비만, 운동, 음주와 같은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표 45> 대전시 흡연인구의 금연에 관한 견해

(단위 : %)

시점:2003	20세 이상 흡연인구	시도한 적 있다	시도한 적 있다-			시도한 적 없다	시도한 적 없다-		
			계속 피우겠음	줄여서 피우겠음	금연하겠음		계속 피우겠음	줄여서 피우겠음	금연하겠음
초졸이하	100.0	46.1	23.0	59.1	17.9	53.9	55.4	42.6	2.0
중졸	100.0	53.4	11.1	78.1	10.9	46.6	43.3	54.2	2.6
고졸	100.0	60.0	6.8	64.3	28.9	40.0	31.8	61.1	7.2
대졸이상	100.0	64.3	4.5	60.9	34.6	35.7	26.6	60.2	13.2
전문관리	100.0	61.2	5.5	50.5	43.9	38.8	23.2	58.2	18.6
사무	100.0	71.5	1.5	65.4	33.1	28.5	22.9	64.2	12.9
서비스판매	100.0	63.5	6.8	69.6	23.6	36.5	37.8	54.5	7.8
농어업	100.0	80.7	-	100.0	-	19.3	50.0	50.0	-
기능노무	100.0	56.0	9.7	66.8	23.5	44.0	35.2	59.6	5.2

· 2003년, 통계청

- 사회계층에 따라 불건강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형평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한 수평적 형평성이 이뤄져야 함.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치는 의료비 지출의 불형평을 야기시켜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져오며 사회적 통합에 역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계층별로 심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계층의 30.1%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31.8%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표 46>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 포기경험 비율

항목	구분	포기 경험 비율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30.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8.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6.4%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4%
	200만원 이상	7.3%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종	21.6%
	의료급여 2종	31.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6.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1%

자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추출조사결과 (김혜련 외.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병원 이용률이 높으며 특히나 200만 원 대의 가구소득층을 기점으로 소득이 적어질수록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표 47> 조사대상자 특성별 2주간 외래의료 이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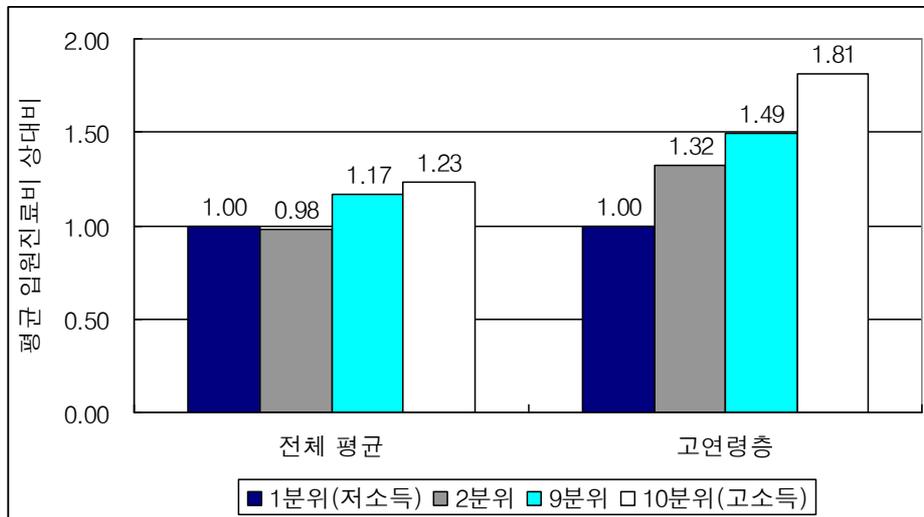
가구소득(월평균)	전체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50만원 미만	31.64	1.12	1.68	3.75	15.68	1.4	2.14
50~100만원 미만	22.58	0.88	1.38	1.26	12.08	1.64	1.26
100~150만원 미만	22.89	0.98	1.16	1.01	14.22	1.27	0.74
150~200만원 미만	20.47	0.55	0.92	0.67	13.05	2.05	0.87
200~250만원 미만	20.51	0.8	1.07	1.19	12.85	1.43	0.73
250~300만원 미만	21.08	0.51	0.52	1.43	13.96	2.5	0.8
300만원 이상	20.51	1.37	0.73	0.79	13.75	1.27	0.37

- 주 : 1) (2주간 외래의료 이용자 수÷전체 조사대상 인구)×100
2) 약국 이용자 중 처방·조제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 제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2

○ '0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입원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의료이용의 격차 확대는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평균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20% 이상 입원진료비를 많이 지출
- 고연령층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차이는 80% 수준으로 전체 평균의 차이를 크게 상회
-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

그림 6. 소득계층별 평균 입원진료비 상대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 복합만성질환자의 종합병원 평균입원진료비, 고연령층 : 70~74세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

○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연령별 유병율을 살펴본 결과, 60세를 기준으로 급격히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60세 이상 유병노인 수가 5만 7천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함.

<표 48> 2주간 대전시 연령별 유병율

(단위 : 명, %)

구분	0세 이상 인구	유병률	해당 인구 수	추정 인구 수
0~29세	100.0	16.5	657,014	108,407
30~59세	100.0	19.9	631,522	125,672
60~69세	100.0	39.6	84,332	33,395
70~79세	100.0	46.1	39,034	17,994
80세 이상	100.0	41.3	14,394	5,944

· 통계청, 2003년

4. 접근성 취약과 공공 인프라 부족

- 도시와 농어촌형의 지역 보건소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는 보건소 1인당 관리 가구 수가 2만여명인데 반해 도의 보건소는 588명으로 4배의 차이가 남. 오히려 도시형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표 49> 도시, 농어촌 지역 방문보건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보건소 수	관리 가구 수	개소당 관리가구 수	개소당 방문보건 담당자 수	1인당 관리 가구 수
광역시(7개)	74개	509,465	6,885	3.2	2,151
도(9개)	172개	287,953	1,674	2.8	588
전국	216개	797,418*	3,242	3.0	1,08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4.12.31
- 방문보건관리가구수(797,418)는 전체 가구수(17,391,932)의 4.5%에 해당

- 전체 OECD 국가 중 공공병상의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13%로 최하위권이 며 비율 또한 감소하고 있음.

<표 50>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단위 : %)

	기관수	병상수
'90	15.2	16.0
'92	13.4	15.2
'94	11.9	14.5
'96	11.2	13.7
'99	9.0	13.7
'02	7.7	13.6

자료 : 도세록.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와 보건의료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5년 4월호

-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 추구보다는 국민들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역할이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을 민간 위탁한 이후 1인당 1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표 51>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단위 : 원, 음영은 민간위탁 기간)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100)	28,357 (105)	42,042 (155)	40,950 (151)	116,123 (429)	117,703 (434)	107,825 (398)	102,739 (379)
이천의료원	37,119 (100)	36,893 (99)	45,993 (124)	46,335 (125)	52,367 (141)	107,276 (289)	109,328 (295)	103,869 (280)

· 이진석,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2005년

=>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심각하며, 수급권자 대비 공공의료 혜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바 도시보건지소 설치 등의 자치구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